



더불어

1.2월

발행처-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 발행인-최상철 | 기획-홍보팀 | 홈페이지-www.region.go.kr | 통권6호

정책 핫이슈

「발로 뛰며 실천하는 지역발전의 元年」 - 2010년도 지역투자 정책 추진방향 -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2010.1.20)를 주재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역발전'을 새해 국정운영 5대과제에 포함시켰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지역투자)가 2010년 새해부터 피부에 와 닿는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화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정책인 광역경제권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지역상생발전기금과 같은 자주재원 확충 등이 그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2010년=지역발전 전기마련'의 원년으로 천명하고, 지역발전을 국정운영 5대과제에 포함시킨 데 따른 것이다. < 2면 계속 >

Contents

정책 핫이슈 1

「발로 뛰며 실천하는 지역발전의 元年」

위원장 메시지 3

"피부에 와 닿는 체감적인 지역정책이 필요한 때"

정책 포커스 4

지역발전 5개년계획,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승인
(지역발전위원회 송우경 연구위원)

정책 리뷰 5

내가 본 지역발전 5개년계획- 새로운 지역발전의 성공요건
(산업연구원 장재홍 지역정책팀장)

5+2광역경제권 현장 6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소식
〈동남권〉 광역경제발전 워크숍
〈대경권〉 동남권 신공항 및 혁신도시 토론회
〈대경권〉 광역발전 유관기관 워크숍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의 국가경쟁력 세미나
〈수도권〉 지역투자·수도권 광역투자 자문위원 확대 연석회의

시장·군수 列傳 7

일등군민·부자남해를 향한 도전(경남 남해 정현태 군수)

지역 안테나 8~9

충북, 농지규제 완화로 효율성 높인다
논산, 지자체 도로관리 '올려 가져먹기'
제주, '세계평화의 섬', 한태평양 평화공원 등 5주년 행사 다채
경주, 경주읍성 옛모습 되살린다
전남, J프로젝트 구성지구 하반기 착공

나주, 고려시대 목선, 영산강에 다시 뜬다
화천, 산천어축제 명품화·국제화 나선다
부산, 부산 최대 현안은 '복지 시스템' 구축

중앙 풍향계 10~11

지식경제부,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25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시행
국토해양부, 4대강 공사현장 웹카메라로 실시간 점검
행정안전부,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전면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예산지원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농가이용 편의 기대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지역 복지수준 도시지역 근접

글로벌 인사이드 12

해외정책 사례연구 - 미국 서부 광역경제권



▲ 지난해 7월 열린 광역경제권 국제컨퍼런스 개최식 장면, 지역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 7월 초광역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지역청은 지난 2년간 균형+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발전 철학과 정책 구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몰두해 왔다. ▶법령개정(국가균형발전특별법) ▶중기 종합계획수립(지역발전5개년계획) ▶3차원 지역정책 정립(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발전방향 및 기본구상) ▶추진기구 설립(5+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지방재정 지원체계 개편(지방소득·소비세 도입, 포괄보조금제도 도입)로 상징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광역경제권 핵심사업 착수(선도산업·인재양성, 30대 선도프로젝트) 등이 그렇다.

지역청은 이 같은 법·제도적 기반위에 2010년부터 체감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펼친다. 광역경제권-기초생활권-초광역개발권 등 3차원 지역정책의 뼈대에 살과 근육을 붙이는 실천적인 사업을 전개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먼저, 광역경제권 전략의 내실화다. 올해부터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은 20개 프로젝트별 제품화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제품 완료 등 상품화를 위한 초기성과를 내고, 3년 뒤 선도산업의 파급효과를 수출 60억 달러, 고용창출 17,000명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또 선도산업 관련 인재양성사업도 다진다. 지방 20개 대학에서 인재양성센터별로 평균 1,200여명의 대학(원)생을 집중 교육하는 한편, 기업맞춤형 강좌개설, 인턴십 등 Co-op교육 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산·학·연 협력도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의 대형 SOC사업인 30대 선도프로젝트도 올해 총 3조 6천억원의 국고를 투입해 타당성조사, 설계 및 공사 등 사업별 목표공정을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시·도 단위의 지역발전사업 및 추진기구를 광역경제권 단위로 재편하는 정책도 가속화 한다. 지역청은 지역사업 관련 실적평가, 시행계획 작성, 연계협력사업 발굴, 유관기관협의회 활동 등을 통해 5+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 거버넌스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둘째, 기초생활권에 대한 지원강화다. 지자체별로 2월까지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09~14)을 수립토록 지원한다. 지역청은 우수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지역별 특화발전, 시군 경계를 넘는 연계·협력, 소프트웨어형 지역개발 등 현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전파·확산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권 유형별(도시형, 농농연계형, 농산어촌형) 맞춤형 지역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하고, 포괄보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재정제도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셋째, 초광역개발권 후속조치다. 작년 말 기본구상 발표에 이어 이미 확정된 동·서·남해안 및 접경 등 4개 개방형 벨트는 벨트별 중점 특화·구현가능 전략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한다. 특히 내륙벨트는 지자체가 제안한 5개 벨트를 검토·보완하여 벨트수 및 권역을 선정하고, 기본구상 수립에 이어 연말까지는 종합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초광역개발권은 장기 시계(視界)적 성격이나 올해부터 해안권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여 중장기 정책구상의 구체적 사업과 연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체감형 지역정책의 발굴도 빼놓을 수 없다. 중앙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지역정책을 체계화·종합화하는 방안을 올해 지역청 주요업무에 추가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등 지역단위의 경제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 등 지역성장 거점 활성화, 내생적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창조지역 도입, 지역발전과 연계한 도시·농촌 및 SOC 정책방향에는 지역청 역량을 집중투입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방침이다. 🌈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2010년 신년사 —



2010년 새해 벽두부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새해 첫 눈은 서설(瑞雪)로, 상서로운 눈이 많이 내린 해는 풍년이 든다고 합니다. 이제 지역발전 정책도 구호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시책으로 전국의 모든 지역에 瑞雪처럼 내리게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역정책 용어 중에 ‘호설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됩니다. 일본에 있을 때 제 키보다 1m 높게 쌓인 폭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특별히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 호설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처럼, 각 지역상황에 딱 맞아 떨어지는 특성화된 지역발전 정책의 구현을 위해 머리로 고민하되, 가슴으로 애쓰며, 발로 뛰는 곳이 바로 우리 위원회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발전 예산의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지역발전 상생기금 등 자주재원의 확충을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혁신도시·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이 지역경제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역 일자리와 소득창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과의 소통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도, 시·군 지역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위원회 위원들의 현장방문을 정례화하는 한편 지역언론과의 관계강화와 지역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공감대 형성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바람직한 지역정책을 위해서는 지성(知性), 덕성(德性), 야성(野性)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머리로 고민하되, 가슴으로 애쓰며, 발로 뛰는 자세가 그것입니다. 지난해는 지역발전의 양 날개인 균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3차원 지역발전정책의 커다란 틀과 패러다임을 짜는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지역정책만으로는 공감대 확산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올해부터 머리로 고민하는 것을 넘어서, 따뜻한 가슴(德性)과 발(野性)로 뛰는 지역발전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체감형 지역발전정책의 확산입니다. 이제는 3차원 지역발전 정책을 일자리와 소득창출, 그리고 삶의 질과 바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밀착된 시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역발전과 도시’, ‘지역발전과 농촌’이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지난해는 지역정책의 철학과 비전 등 政策방향을 강조했는데 올해는 그런 정책들을 직접 현실에 투영하는 施策단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올해 전략은 우보호시(牛步虎視)형 정책추진입니다. 소처럼 우직하게 한 걸음씩 내걸되, 호랑이처럼 날카로운 시선으로 급변하는 정세를 살피면서 지역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포함하여 6.2 지방선거 등 굵직한 지역현안들이 많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의 지역발전은 사회간접자본 같은 하드웨어보다는 사회적 자본과 제도적 자본 같은 소프트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위원회가 3차원 지역정책의 시책화 과정에서 경제는 물론이고 교육·문화, 복지, 삶의 질, 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를 통해 피부에 와 닿는 지역정책과 발로 뛰면서 실천하는 지역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성을 뛰어 넘어 덕성, 야성의 조화로운 지역발전 정책을 구현하는 2010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상철

〈지역발전 5개년계획 –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통과 – 대통령 승인〉

– 성장+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잠재력 극대화 –

지역발전위원회 송우경 연구위원

이명박 정부의 新지역발전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고 있는 지역발전5개년계획이 '09년 12월 15일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승인을 통해 법적인 수립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진입하였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 신설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연계된 중기 실행계획(2009년~2013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본 계획은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08.9월) 이후 '08년 12월부터 '09년 10월까지 중앙부처와 5+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산·학·연 등 민간기관의 광범위한 참여와 협력을 통해 범정부적 국가계획으로 수립되었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공동체 창조'를 계획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목표는 4대 전략과 5+2 광역경제권별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실현된다. 4대 전략은 첫째, 5+2 광역경제권 활성화(선도산업, 인재양성, 선도SOC사업 등을 집중 지원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주도로 발굴한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을 실천), 둘째, 163개 시·군의 기초생활권 형성(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유형화하고 성장촉진지역·특수상황지역 등 특성화된 개발을 지역주도로 추진), 셋째, 4+α 초광역개발권 구축(동·서·남해안, 남북접경지역 및 내륙벨트 등 4+α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및 벨트별 발전계획 수립·추진), 넷째 지방분권·규제 합리화(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업투자에 장애가 되는 핵심규제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유도)이다.

5+2 광역경제권발전계획은 광역권별 특성 및 성장잠재력을 반영한 비전을 설정하고, 산업, 인력, R&D, 문화관광, 발전거점, SOC 등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은 '선진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비전으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법제도 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충

청권은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비전으로 IT·BT산업의 핵심거점, 과학기술 및 인재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산업의 창조지역'을 비전으로 친환경 녹색산업 거점육성, 문화예술과 해양·생태관광 육성 등을 추진한다.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를 비전으로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녹색성장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남권은 '한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를 비전으로 물류·교통 등 신성장벨트 구축, 첨단 해양산업의 세계 일류화를 지향하고 있다. 강원권은 '한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비전으로 생명·건강산업의 육성, 타 광역권과 연계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비전으로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 관광·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등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하였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의 계획수립과 재정운용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도 구축하였다. 본 계획의 실천을 위한 총투자소요는 161조 560억원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운영, 지방의 가용재원 확대, 민자부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발전5개년계획은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역이 상호협력적 실천을 통해 균형과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지역발전5개년계획과 균형발전5개년계획 비교〉

	균형발전5개년계획('04~'08)	지역발전5개년계획('09~'13)
배경	·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발전격차 해소	·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기조	· 지역균형발전의 추구	· 지역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
·	· 기계적·산술적 균형정책 강조	· 연계·협력에 기반한 광역화 추구
특성	· 시도 행정단위를 계획단위로 설정	· 기초, 광역, 초광역을 계획단위로 설정

〈내가 본 지역발전5개년계획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성공요건〉

–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구상의 조율 필요 –

산업연구원 장재홍 지역정책팀장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틀

새해부터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 국토를 5+2 광역경제권, 163개 기초생활권, 4+α 초광역개발권 등 세가지 유형의 공간범주로 구획하고, 범주별로 각각 성장잠재력 확충,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개방·협력 촉진에 목표를 둔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서 새로이 구성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동사무국도 금년부터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명박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은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다. 기존 16개 시·도 단위의 분절적 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자원의 지역 간 상호보완적 활용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역발전정책 틀의 큰 변화는 이론적으로 보나 해외 사례를 보나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권역을 3~6개로 보다 크게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으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정책 기획·집행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소지역주의 극복이 관건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성공 여부는 개별 시·도 또는 시·군·구 차원의 소지역주의적 ‘내 것 챙기기’ 행태의 극복에 달려 있다. 소지역주의는 광역적 차원에서 꼭 필요한 혐오시설은 기피하고 선호시설만 자기 지역 내에 두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동일 경제권 및 생활권인 광역경제권 내에서 시·도 간 또는 시·군·구 간 다툼으로 여러 사업이 부적절한 곳에서 추진되거나 중복 추진되어 자원 낭비와 성과 부진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주민 직선에 의해 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지역주의의 극복은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자치단체장들은 투표를 의식하여 단기적 관점에서 주민 선호시설이나 숙원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기획, 집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자치단체장들의 크고 넓은 안목과 주민 설득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차원의 사업 관련 권한을 광역발전위원회 및 동 사무국에 대폭 위임하는 동시에 사무국의 기획·조정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역 언론에서도 광역경제권의 총체적 장기발전 관점에서 이러한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유도하고 그 업적을 적극 보도함이 바람직하다.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4+α 초광역벨트 구상의 조율 필요

또 하나의 과제는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과 4+α 초광역벨트 구상의 조율이다. 4+α 초광역벨트 구상은 국토 외곽 및 내륙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들 시·군은 5+2 광역경제권에도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육성 및 혁신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한다. 4+α 초광역벨트 구상은 이러한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호보완적인 부문에 초점을 두고 국토의 장기적 발전잠재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프라 정비·확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추세를 필히 검토하여 신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국책 연구소 설립 등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인접 대도시의 정주기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도시의 경쟁력 약화를 예방하고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기획 및 추진체계 정비 필요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은 복수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지역정책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획 및 추진 체계의 조속한 정비가 요청된다. 기존 행정시스템과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추진시스템 간의 조화, 각 시·도별 유관기관 간의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광역적 관점에서 사업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개별 시·도가 보유한 생산요소 및 혁신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연결의 경제’를 구현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지역발전의 요체이다.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소식 (09.10.6)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옥우석)는 지난해 10월 6일 부산광역시 금정체육공원에 위치한 광역사무국에서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 박맹우 울산광역시 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소식과 함께 사무국 직원과의 환담, 그리고 다과회의 순서로 치러졌다.



광역경제발전 워크숍 (09.11.26~09.11.27)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옥우석)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이틀간 경남 통영시 충무관광호호텔에서 <광역경제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역사무국과 시·도, 발전연구원, 테크노파크, 산단공, 선도산업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동남권 광역경제권 특강(신라대 박재욱 교수)에 이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구축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대경권



동남권 신공항 및 혁신도시 토론회 (09.12.4)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박광길)는 지난해 12월 4일 김천 파크호텔에서 <동남권 신공항 및 혁신도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경북 혁신도시 인근 시·군의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과 함께, 초광역권 연계 발전방안 및 내륙벨트 구성, 그리고 광역 연계협력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에 대한 분과회의를 가졌다.



광역발전 유관기관 워크숍 (2010.1.21~2010.1.22)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박광길)는 지난 1월 21일부터 이틀간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광역발전 유관기관 워크숍>을 가졌다. 이 워크숍에서는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조명을 주제로, 대경권 광역발전계획을 소개하고, 광역사무국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 한 뒤, 유관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선도하기 위한 대경권 광역사무국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의 국가경쟁력 세미나 (09.12.7)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강래천)는 지난해 12월 7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수도권 광역경제권, 미래의 국가경쟁력>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협력하여 수도권 전체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동북아를 넘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역·수도권 광역사무자문위원 확대 연석회의 (09.12.22)

수도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사무총장 강래천)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지역·수도권 광역사무자문위원 확대 연석회의>를 열었다. 지역사무 소속 자문위원과 수도권 광역사무 소속 자문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연석회의는 수도권 광역경제권의 발전정책과 연계협력 등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교환과 유대강화를 위해 개최됐다.

남해군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남해군은 신라 경덕왕 16년인 757년부터 불린 이름입니다. 고려 때는 팔만대장경의 판각성지로,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종식한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펼쳐진 곳입니다. 또 화전별곡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자암 김구,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로 유명한 서포 김만중 그리고 약 천 남구만과 후송 유익양 등 200여 명의 유배객이 머물렀던 유배문학의 본 고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남해안 선벨트 사업이 본격화되면, 요트와 크루즈 관광 1번지인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비상할 꿈을 꾸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군입니다.

군수님은 어떤 군정철학을 갖고 계신지요?

군민화합을 최고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대화합의 행정’이 목표입니다. 제 좌우명은 지공무사(至公無私), 자리이타(自利利他)이며, 특히 조선시대 탕평정치의 이념적 토대였던 대중지정(大中至正)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自利利他는 내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상생(相生) · 발전을 뜻합니다. 大中至正은 크게 중도로 가는 것이 바르다는 의미로 영 · 정조 75년간을 지탱한 탕평정치의 근간이었습니다. 대화합의 행정은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당(黨), 이념, 지역을 넘어 군민과 향우들을 하나로 만드는 화합을 통해 지역 사회의 기적을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남해군의 중점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등군민’ 과 ‘부자남해’ 를 만들기 위한 3대비전은 국제해양 관광도시 · 스포츠 휴양도시 · 환경농업도시 건설입니다. 먼저 정부의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우리 군을 요트와 크루즈관광 1번지인 국제해양 관광도시로 조성할 것입니다. 또 덴마크 축구대표팀 유치(2002년 한일월드컵 축구대회 당시)와 쿠바 야구선수단 및 나



▲농촌지원활동 중인 정현태 군수(가운데)

“지역발전은 법·예산 보다 열린 마음입니다”

— 일등군민 · 부자남해를 향한 도전
경남 남해 정현태 군수

이집리아 축구 대표팀(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유치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최고의 스포츠 휴양도시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계절 푸른잔디 재배기술을 잔디아카데미를 통해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환경농업 실천의 해’ 로 정하고, 100억 원의 국 · 도비가 지원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을 추진해 군 전역을 환경농업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해군만의 문화적 · 역사적 명품자산이 있나요?

남해군 자체가 보물섬입니다. 108계단식 논, 가천 다랭이 마을(명승 15호), 보리암(전국 3대 기도처), 금산(錦山, 이성계가 조선개국을 위해 100일 기도한 산),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해오름예술촌 등 숨겨진 자산들이 넘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준공하게 될 전국 최초의 유배문학관은 유배객들의 진한 문학의 향기와 진솔한 삶의 흔적을 체험하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유배문학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은?

지역발전은 다름 아닌 인재육성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인재 육성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랍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은 법과 예산이 아니라, 닫힌 마음입니다. 지역조차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뿐 아니라, 특히 휴먼웨어(humanware)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지역발전 세미나와 행사를 서울보다는 지역에서 좀 더 많이 개최해야 합니다. 지역소리를 듣고, 지역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창조적인 정책을 마련하자면, ‘현장’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력

1984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대변인
1997	남해신문사 기획실장 및 편집국장
2000	남해인터넷뉴스 대표이사
2000	전국지방자치개혁연대 창립위원, 경남자치연대 대표
2000. 4	제16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2007. 7	한국도로공사 이사
2008. 6	제42대 남해군수(현)

충청권 충북, 농지규제 완화로 효율성 높인다

충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해 농지이용의 효율을 높인다. 올해부터 농지에 양어장과 양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제도'를 개선해 기간을 6년(연장포함)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다만 농지로 원상복구가 어려운 고정식 시설의 양어장·양식장은 종전처럼 허가(진흥지역내) 또는 신고를 받아 설치해야 한다. 또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를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고시해 소유제한을 완화, 비농업인도 소유해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시장·군수가 읍·면지역의 농업진흥지역밖 2만㎡ 미만인 농지로서 영농여건이 불리해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올해 말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전용허가 때 읍·면·동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절차를 거치던 농지관리위원회 제도를 폐지하고, 농지전용허가권자가 확인해 조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해 농지소유자격도 완화했다.

논산, 지자체 도로관리 '울며 겨자먹기'

기초 자치단체들이 국도와 지방도의 유지관리 비용 마련에 고전하고 있다. 논산시에 따르면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국도 및 지방도의 유지와 관리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아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국도와 지방도에서 부과한 과적차량 범칙금 등을 국고로 거둬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들은 과적차량 통행으로 파손된 도로보수를 위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들은 매년 도로포장과 차선도색 등을 포함한 도로보수에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이에 따른 상급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자, 이들 도로의 관리권한을 해당 시군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도와 지방도 관리는 관할구역이 넓고 분산돼 있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제설 작업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논산시를 비롯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 권한을 시·군으로 이관해 관리토록 하거나 도로 관리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권 '세계평화의 섬', 환태평양 평화공원 등 5주년 행사 다채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 지정 5주년을 맞아 다양한 평화 실천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말 '세계평화의 섬' 지정 5주년을 맞아 평화메시지를 발표하는 한편 향후과제 등을 주제로 정책세미나와 찾아가는 평화수업 등을 열어 평화의 섬 이미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에는 스위스에 있는 국제연합훈련조사연구소(UNITRA)의 지역훈련센터(CIFAL)를 제주에 설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어 7월에 제주국제평화센터에 지역훈련센터를 설립,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과 인간, 안보 등에 대한 국제세미나와 워크숍을 여는 등 국제사회에 평화의 섬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현재 지역훈련센터는 미국 애틀란타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 프랑스 리옹 등 모두 12개국에 1곳씩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사)제주국제교류협의회(회장 고성준)는 오는 7,8월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인근인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83의 7번지 일대 1,500여㎡에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을 조성한다. 환태평양 평화소공원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에 이어 세계 6번째로 만들어 진다.

대경권 경주, 경주읍성 옛모습 되살린다



▲경주읍성 조감도

경주시는 1012년 고려시대에 처음 축성됐던 동부동과 북부동의 경주 읍성을 2020년까지 복원을 마무리한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작년까지 사업비 177억원을 투입해 토지 1만6천 662㎡와 가옥 79채를 매입하고, 현재 동쪽 성벽 56m를 복원했다. 시는 또 조만간 정비복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사유지 2,000여㎡와 주택 5채를 사들인 뒤 동문 터 발굴조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모두 605억원을 투입해 동·북쪽 성벽 1,100m와 치성(雉城) 12개소, 성내유적을 복원하게 된다. 시는 또 축성 1,000년이 되는 2012년에는 관련 학술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사적 제96호로 지정된 경주읍성은 지방통치의 중심지로 고려시대에 동경유수관이, 조선시대에는 경주부야가 있던 곳이다. 고려 현종 3년(1012년)에 축성된 읍성은 조선 영조 22년(1746)에 개축됐으며, 당시 둘레는 총 2,300m로 동서남북에 4개의 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일제 강점기 때 대부분 파손됐다. 경주시는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성벽도 복원해 옛 읍성의 모습을 완전히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화천, 산천어축제 명품화·국제화 나선다

화천 산천어축제가 유사축제와의 차별화에 나섰다. 화천군에 따르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겨울축제 개최가 잇따르면서 산천어축제의 고급화와 국제화를 통한 차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곡의 여왕이라 불리는 산천어가 1급수 맑은 물에 서식하고 다량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건강식으로서의 장점을 부각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축제장내 도우미들의 서비스 제고 등 모든 프로그램의 고급화를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해가 갈수록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에 투입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영어안내 매뉴얼을 제작 활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화천군 관계자는 “상당수 신생 겨울축제가 8년간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져 온 산천어축제를 모방·운영하는 복제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독특한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차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산, 부산 최대 현안은 ‘복지 시스템’ 구축

부산시민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취약계층 복지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실현과제로 꼽은 반면 전문가들은 우선 교육·보육정책을 강화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매니페스토 부산본부가 두 달간 전문가와 부산시민 대상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해 10대 의제를 발굴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부산시민 1천명을 대상 정책수요조사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우선 복지시스템 구축’이 1순위 의제로 꼽혔다.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동서 지역불균형 해소와 균형적 개발 등을 통한 열악한 원도심 지역지원’ ‘해양도시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 개발’ 등의 순으로 선정됐다. 또 전문가들이 최우선 순위로 꼽은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 추진’은 6위에, ‘시민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최하위에 그쳤다. 반면 전문가 180명을 대상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고강도 교육·보육정책 추진’이 꼽혔으며, ‘새로운 성장동력 및 주력산업 재조정과 육성’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위원회 설치’ ‘시민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등이 뒤이었다. 시민들이 최우선 순위로 꼽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시스템 구축’은 5위에 불과했다. 매니페스토 부산본부는 향후 심층토론과 3차례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정책의제를 최종 확정하고, 지방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에 나설 계획이다.

mke 지식경제부

■지방이전 기업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지식경제부는 지방이전 보조금제도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조금 집행의 실효성과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지원 예산한도를 최고 15%로 정해 특정지역에 과도한 지원을 막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기업이 낙후지역(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현재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10인까지 하향 조정해 지원가능 기업을 8500여개에서 2만3000여개로 약 3배 확대키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교부실적 5%미만 지역에 대해서도 총 투자액 800억원 이상의 기업이 이전할 경우 최대 이전 지원한도를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투기적 성향이 높은 입지보조금을 투자 및 고용보조금의 형태로 전환키 위해 부지매입 입지보조금 지원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축소하는 대신 고용보조금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자기책임하에서 투자유치 기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 공사현장 웹카메라로 실시간 점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월 8일 금년도 첫 현장점검으로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통합사업관리방안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강 금남보 시공현장을 점검하였다.

통합사업관리방안 워크숍에서는 4대강 사업의 공사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구축한 4대강살리기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내용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다기능 보 현장별 사업현황 발표가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웹카메라를 이용한 실시간 공사현장 점검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4대강 사업 통합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 종합상황실과 주요 시설물인 다기능 보 공사현장에 웹카메라를 설치해 공사 진행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체계적인 공정관리, 주요현장 실시간 확인, 불요불급한 공정보고가 가능해져 사업 효율성이 향상되었다.



기획재정부

■25개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시행

기획재정부는 농산물의 수입증가 또는 수입가격 하락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녹두, 팥 등 25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운용하기로 했다. 특별긴급관세는 우르과 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수입 자유화된 농산물 중 일정수준 이상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WTO에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이다. 금번 조치는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민감한 농산물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 생산농가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대상품목〉

- ▶ 수입물량증가 예상 품목(2개) : 메밀, 기타곡물(울무 등)
- ▶ 수입가격하락 예상 품목(19개) : 밀전분, 홍삼 등 인삼류
- ▶ 물량 · 가격 복수기준 품목(4개) : 녹두, 팥, 땅콩 등



행정안전부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전면 도입

행안부는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제한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고 수수료 부담과 자치단체별 납부방식 차이 등으로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며 납부 즉시 전국 어디서든 지방세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 개편되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인한 불이익도 없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예산지원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통합운영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운영학교란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급이 다른 학교가 하나로 합쳐진 형태를 뜻한다. 현재 전국 100개교가 운영 중이며 이 가운데 96곳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교과부는 향후 3년간 50곳의 통합운영학교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통합운영학교는 모두 자율학교로 지정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학교 급별 수업시간을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도록 했다. 또 통합운영학교 중 교과교실제 선정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점제와 무학년제 등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 실시기로 했다.

모든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는 자체 자율성 확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학교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세운 20개교를 따로 선정해 연간 3000만원씩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 통합운영학교로 전환하는 곳도 학교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부 예산을 교부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농가이용 편의 기대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농기계임대사업 대상자로 61개 사업소(시·군)를 선정하고 500억원(국고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한곳당 6억~12억원을 지원해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보관창고 설치, 관리장비 구매 등에 쓰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전국적으로 134곳에서 166곳으로 32곳이 늘게 됐다. 기존의 임대사업소 가운데 29곳은 수요 증가로 시설·장비를 증설하게 된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가격에 비해 사용일수가 극히 적어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농기계나 발농사의 이식·수확작업처럼 기계화율이 낮은 분야의 농기계를 정부가 구입해 빌려 주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임대사업소를 장기적으로 350곳까지 늘려 시·군당 2~3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논산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창고

보건복지가족부

■농어촌 지역 복지수준 도시지역 근접

보건복지가족부가 2009년도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결과 평균점수가 67.33점으로 2008년 64.50점보다 약 5% 증가하였고, 2007년 63.15점보다는 약 7%가 증가하는 등 기초 자치단체 복지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거 3년간의 평가에서는 농어촌 지역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번에는 대도시보다 근소한 차이로 복지 평균점수가 앞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지재정, 복지시설 등 복지 인프라 부족하더라도 지자체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 여하에 따라 복지수준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07~'09 지역별 복지종합평가 총점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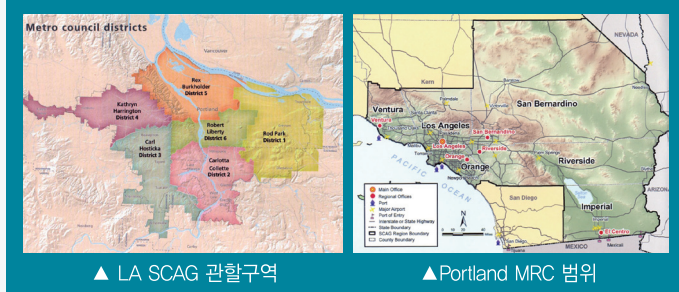
(단위: 점, %)

지 역	2007	2008	2009	증감률('07~'09)
총 점	63.15	64.50	67.73	7.3
대도시	64.03	66.23	66.46	3.8
중소도시	64.83	65.61	68.64	5.9
농어촌	60.76	61.87	68.02	11.9

〈해외정책 사례연구 - 광역위원회 사무총장단 해외연수〉

미국 광역경제권 추진기구 운영현황과 시사점

- 미국 최대 광역기구인 SCAG와 미국 최초 광역기구인 MRC 방문 -
-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 갈등조정 · 중앙정부 강력한 견인이 성공요건 -



▲ LA SCAG 관할구역

▲Portland MRC 범위

우리나라는 2009년 5+2 광역경제권 추진기구를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구 역사상 최초의 광역경제권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소하고 어색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미국 서부지역 광역경제권 추진기구의 계획수립, 거버넌스, 갈등조정 등의 동향과 시사점을 파악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필자도 이 연수단의 일원으로 참여해, 미국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첫 번째 방문지는 36개 카운티, 189개 도시, 인구 1,900만 명으로 '65년 지방정부들의 자발적 협의체로 출범한 미국 최대의 광역계획기구인 SCAG(Southern California Association of Governments, LA)였다. SCAG는 연방 · 주 정부의 위임을 받아 교통 · 주택 · 대기 · 성장관리 등에 대한 장기광역계획(Regional Comprehensive Plan, Regional Transportation Plan)을 수립 · 평가한다. 또 자료수집 · 분석 · 예측 및 지자체 지원을 하는데 예산의 79%는 연방정부, 12%는 지방정부, 4%는 주정부로부터 각각 지원받는다. 두 번째 방문지는 3개 카운티, 25개 도시, 인구 140만 명으로 구성된 포트랜드 광역권을 관리하는 미국 최초의 광역정부로서 '78년 주민투표로 출범한 MRC(Metro Regional Center, Portland)였다. MRC는 장기성장관리계획(Region 2040)

을 수립하고 관할구역내의 토지이용계획 조정, 인구예측과 도시성장경계 설정, 경량전철, 컨벤션센터, 동물원 관리 · 운영, 광역쓰레기 ·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MRC에는 150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예산은 연방, 주정부 보조금, 지방세, 수익금으로 충당된다.

이번 연수를 통해 3가지 시사점을 발견했다. 첫째, 미국 서부지역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는 전적으로 지방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구성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둘째,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 서부지역의 경우 정착 때까지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 · 갈등 · 부작용이 있었지만,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 갈등조정을 통하여 해소했다는 것이다. 셋째, 역사적 배경과 사회구조면에서 미국 서부지역과 다른 한국에서 광역경제권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도와 견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현지의 한국인 전문가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SCAG의 Simon Choi 박사와 MRC의 Rod Park 광역위원,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의 C.H.Christine Bae 교수와의 질의답변)

5+2 광역경제권의 갈 길은 멀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우리의 광역경제권 거버넌스도 미국의 경우처럼, 인내심을 갖고 갈등조정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서부지역이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정착으로 경제 · 사회적 번영을 이뤄 온 것처럼,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조속히 진입하기 위해서는 5+2 광역경제권 거버넌스가 하루빨리 성공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이번 연수는 충청권 광역경제권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책임진 필자에게 사명감을 일깨우고, 배전의 노력을 위한 각오를 다지게 해 준 소중한 기회였다.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권 오 창



▲시애틀 워싱턴 대학의 C.H.Christine Bae 교수와 토론하는 연수단



▲로스앤젤레스 SCAG에서 기념촬영한 연수단